의안 번호	76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유치 대정부 건의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창 원 시 의 회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안

(정순욱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76

발의연월일 : 2026. 9. 23.

발 의 의 원 : 정순욱・감규상・김원일・박강우・박영주 백승규・변보미・서명일・이정희・진형익 홍용채 의원(11명)

1. 제안 이유

❍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행정의 중심축이 동남권으로 옮겨졌으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한 도시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 일극을 또 다른 일극으로 대체하는 데 그칠 우려가 있음.

❍ 진해는 해군기지가 자리한 해양안보 거점이자 부산항 신항과 진해신항을 품은 항만물류 중심지이며, 창원의 조선・기계・방위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도시임.

❍ 이에 해양환경・해양안전・항만물류・해양과학기술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진해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진해를 핵심 이전지로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함.

2. 주요 내용

❍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해양환경・해양안전・항만물류・수산・해양과학기술 분야 공공기관의 진해 이전을 반영할 것을 건의함.

❍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기준에 기관의 업무 특성과 지역 산업・항만・연구 인프라 간의 기능 연계성을 명시적으로 반영할 것을 건의함.

❍ 개별 기관의 단순 이전에 그치지 않고, 관련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지하는 해양·항만 공공기관 집적지구를 진해에 조성할 것을 건의함.

❍ 진해신항과 연계한 국가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해양안전·항만관리·친환경 스마트항만·해양환경 등 관련 공공기능을 함께 배치할 것을 건의함.

❍ 창원의 조선·기계·방위산업 기반과 해양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하여 해양모빌리티,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등 신산업을 육성할 것을 건의함.

3. 건 의 문: 붙임

4. 수 신 처: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재정경제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시대위원장, 경상남도지사

해양 관련 공공기관 진해 유치 대정부 건의문

북극항로 시대의 관문이자 해양의 도시인 진해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동남권 해양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조성해 주십시오.

진해는 대한민국 해양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함께 있는 천혜의 해양도시입니다. 국가 해양안보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온 해군기지가 자리하고 있으며, 인근에는 부산항 신항이 운영되고 있고 총사업비 15조 원 규모의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창원의 조선·기계·방위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어, 해양·항만·물류·조선산업이 하나로 결합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으로 국가 해양행정의 중심축은 이미 동남권으로 옮겨 왔습니다. 그러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이 한 도시에만 집중된다면, 수도권 일극 체제를 또 다른 일극으로 대체하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동남권 전체를 하나의 해양경제권으로 묶고, 그 안에서 기관의 기능과 지역의 산업이 맞물리도록 배치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제 진해를 단순한 항만 배후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 동남권 해양산업과 해양 행정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이에 창원시의회는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진해에 유치하여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진해 이전을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계획에 반영해 주십시오.

해양환경, 해양안전, 항만물류, 수산·어촌, 해양과학기술 등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진해 이전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의 개발에 따라 항만·물류 기능이 크게 확대되는 만큼, 관련 공공기관이 진해에 자리 잡는다면 정책과 행정, 산업 현장이 한자리에서 맞물리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 공공기관 이전지 선정 기준에 산업·기능 연계성을 함께 반영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수도권의 기관을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기관의 업무 특성과 이전 지역의 산업·교통·항만·연구 인프라가 실제로 연계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진해는 해양안보, 항만, 조선·기계산업, 인근 연구·교육 인프라를 하나로 잇는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이 이전지 선정 과정에서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진해를 '해양·항만 공공기관 집적지구'로 조성해 주십시오.

개별 기관의 단순 이전에 그치지 않고, 해양·항만·물류·해양안전·해양환경 분야의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입지하는 집적지구를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과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동남권 해양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 진해신항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해양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해 주십시오.

진해신항은 대한민국의 미래 항만 경쟁력을 좌우할 국가사업입니다.

항만 건설과 물류 기능 확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해양안전, 항만관리, 친환경·스마트항만, 해양환경, 해양과학기술 등 관련 공공기능을 함께 배치하여, 진해신항을 중심으로 한 국가 해양산업 혁신거점을 조성해야 합니다.

하나. 창원의 산업 기반과 해양 공공기관의 기능을 연계해 주십시오.
창원은 조선·기계·방위산업 등 국가 기간산업이 집적된 산업도시입니다. 진해의 해양·항만 인프라와 창원의 제조·기계·방산 역량을 연계한다면 해양모빌리티, 스마트항만, 친환경 선박, 해양안전장비 등 새로운 산업을 육성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 지역의 공공기관 유치를 넘어,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될 것입니다.

진해의 바다는 국가의 자산입니다. 진해는 오랜 시간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온 도시이며, 앞으로는 대한민국 해양산업의 미래를 열어갈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진해신항과 부산항 신항, 창원국가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 해양경제권으로 연결하고 그 중심에 해양 관련 공공기관을 배치한다면,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해양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습니다.

진해의 미래를 넘어 대한민국 해양의 미래를 위해, 해양 관련 공공기관의 진해 유치를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2026년 10월 1일

창 원 시 의 회